

다산포럼



이남주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 교수

북러협력이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북러협력이 글로벌 세력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는 수준까지 진전된 탓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참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군이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두중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해 확전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서방에서 이를 중러관계와 북러관계에 균열을 내는 계기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11.16.)과 한중 정상회담(11.15.)에서 북러 군사협력 강화와 북한의 파병이 의제로 제기되었다. 실제로 북러협력에 중국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다.

대외정책이나 군사전략에서 북한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권 존중을 국제관계의 대원칙으로 삼는 중국이 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이 자율성을 공세적 군사전략 추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중국은 북러협력을 어떻게 볼까

있다. 북미대립 격화와 한반도 군사긴장의 고조는 미중 전략경쟁 강화, 국내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르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트럼프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차이나 패싱이 출현할 수도 있다. 2018~2019년 북미대화가 진행될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협력을 과시했던 상황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북러협력 강화에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하려는 북러의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북러협력의 강화가 북중관계나 중러관계에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첫째, 중국은 세 국가를 각개격파하려는 서방세계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미중전략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산이다.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중국은 순만치한의 관점에서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 이후에도 협력을 확대했다. 올해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브리스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세 차례의 정상회담(5월16일, 7월3일, 10월22일)을 진행했고, 양국 총리 회담도 두 차례(8월21,10월16일) 진행되었다.

둘째, 중국의 입장에서 북러협력은 자신이 간섭할 사안이다. 중국의 간섭은 북중, 중러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독트린에 대한 신뢰도 약화시킨다. 물론 북러협력이 유엔 제재 등을 위

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발언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미국도 이와 관련한 중국의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한반도정세 악화나 우크라이나전쟁에 미국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중국의 책임을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서구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갖지 못한 지렛대를 갖고 있다. 서방세계로부터 경제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필수 공산품을 제공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북중교역이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2023년 북한 대외교역의 98.3%를 차지했다. 북러가 중국의 이익을 무시하며 협력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국이 북러협력을 지나치게 우려할 이유는 없고, 이를 문제로 삼아 북러와의 양자관계를 악화시킬 이유도 없다. 이를 기대하며 중국에 접근하면 실망스러운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 그보다 주목할 것은 지금의 미러, 북미 대립구도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중국에게는 북러협력 강화보다 트럼프행정부 출범 이후 미러관계와 북미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더 큰 관심사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을 더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남북대립이 심화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될 우려에 계도 큰 도전이다. 실현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보다 변화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외전략이 필요하다.

社說

‘청년 엑소더스’ 막아야 광주·전남이 산다

광주·전남 청년들이 일자리 부족과 교육 여건 등을 이유로 고향을 떠나는 ‘청년 엑소더스’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와 전남에서 매년 1만여 명의 청년이 수도권으로 ‘삶의 타전’을 옮기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조사 심층 분석-코호트 변경에 따른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21년 전국 지역별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 편중 강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도별로 보면 2007년에는 서울(27.1%)·경기(18.8%)·인천(5.4%) 등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중이 51.3%로 절반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는 서울(29.1%)·경기(24.7%)·인천(5.4%) 취업 비중이 59.2%로 60%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 취업한 비율은 2007년 3.3%에서 2021년 2.5%로 오히려 줄었고, 전남은 2007년 2.6%에서 2021년 3.0%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엑소더스는 현재 진행형이며 점

차 심화하고 있다. 올해도 과거처럼 어김 없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행을 택하고 있는데 수도권과 지역 간 인적 자원, 교육과 문화생활 등의 격차를 체험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도피하듯 떠난다고 분석한다. 수도권보다 낮은 지역 기업의 연봉 수준도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내보내는 주원인이며, 특히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결정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지역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지역 소멸이 가속화돼 전남지역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 오래고 경제적 생산성도 매년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와 전남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기초지자체들도 이제 청년 엑소더스를 막지 못하면 지방이 사라진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원론적인 말이지만 시·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지역 내에 좋은 일자리 마련 사업을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에도 올린해야 할 것이다.

지역 역량 모아 첨단재생의료 특구 유치해야

광주시가 의료산업 분야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재생의료를 집중·육성할 수 있는 특구 유치가 유효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인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 구조·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인체세포를 이용해 실시하는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말한다. 전 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약 177조원)로, 연평균 17.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이다.

광주시는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제10차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사업에서 ‘생체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재생의료 사업’을 제출해 1차 선정됐다. 이후 시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특구 세부계획서를 기획 중이며,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에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시가 계획 중인 첨단재생의료 규제자유

특구는 동구 대학병원지역, 서구 병원밀집지역,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 북구 첨단과학산업단지 등을 아우르는 90만평 규모이다.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첨단재생의료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광주시는 최근 특구 지정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각계 인사와 기관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대학병원과 두 개의 대학치과병원을 갖춰 어느 지역보다 재생의료 육성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광주가 특구로 지정되면 재생의료산업의 주도권은 물론 병원이나 의료시설들의 환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광주시와 의료계, 국회, 산업계 등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대안 모색 차원에서라도 이번 첨단재생의료 산업 특구 유치가 사활을 걸어야 한다.

청춘 특특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이대로 괜찮을까?



권시은 호남대 축구학과 4년

‘딥페이크’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가? 최근 뉴스에서 신종 범죄 소재로 자주 언급되는 딥페이크란 ‘딥러닝’과 ‘페이스’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 및 분석하여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실존 인물이 아닌 인물과 합성하는 기술이다.

딥페이크는 2017년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서 ‘딥페이크’라는 아이디를 가진 네티즌이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한 편집물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이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딥페이크 범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다. 각종 SNS에 업로드

된 피해자의 사진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음란물에 합성, 익명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포해 전국적 범위에서 피해자가 생겨났다. 하지만 딥페이크 범죄에는 이러한 성범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10월, 중국인 A 씨는 익명의 인물로부터 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메시지로 전달받았다. 영상 속에는 제주도 여행을 떠난 딸이 좁은 방에서 테이프를 목인 채 울며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들은 딸을 납치했다는 말과 함께 8억 원을 보내면 풀어준다고 협박했다. 하지만 제주에 있는 중국영사관을 통해 신고한 결과 경찰은 말짱하게 관광을 즐기고 있는 A씨의 딸을 발견했다. A씨가 받은 영상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요즘은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피싱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동생의 목소리와 비슷한 딥보이스 피싱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해 간 사건이 남양주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딥페이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정교해지고 실제와 구분할 수 없게 발전하고 있다. 물론 AI를 활용해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기술도 함께 생겨나

고 있지만 새롭게 기술이 생겨난다고 해도 과정이 복잡하기에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고 딥페이크 범죄나 딥페이크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짜 뉴스에 당하기 십상이다. 그렇기에 SNS에 업로드된 영상을 곧바로 믿고 주변에 공유하기 보다는 이것이 맞는 사실인지, 실제 영상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물론 딥페이크 기술에 이처럼 부정적인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광복절에는 딥페이크를 활용해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 광복절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 딥페이크와 음성 복원 기술을 접목해 김현식, 김광석, 터틀벡 등 그리운 가수들의 무대를 최근 다시 재현해 내기도 했다.

부정적인 사용 사례가 많이 알려졌을 뿐, 이처럼 긍정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이 딥페이크 기술이다. 최근 이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딥페이크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기보다는 광복절 등의 사례처럼 긍정적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

기고

세월호 기념관, 고하도의 희생만 강요할 순 없다



유재길 전 목포시의원

이 제정되었고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세월호 선체 보존 처리계획서’가 2018년 8월 작성되었다. 계획서의 골자는 세월호 선체를 파손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며,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기념관 및 교육체험관을 건립한다는 것이다. 그 장소가 고하도이다.

고하도와 고하도 주민은 목포시민, 전남도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참으로 고마운 존재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수년간 선체가 갈 곳을 찾지 못해 유가족을 비롯한 전 국민이 안타까워할 당시 이를 풀어준 곳이 바로 목포 신뢰항이 있는 고하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애초 세월호는 목포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목포는 출발지도, 도착지도, 사고 발생지도, 희생자 연고지도 아닌 인양된 선체가 임시로 거처된 곳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목포와 고하도 주민들은 세월호를 풀어 안았다.

그런데 고하도 주민들이 요즘 걱정하는 것은 고하도에 들어설 세월호 선체와 기념관 교육관 체험관 등이 젊은 생명들을 허망히 잃은 슬픔과 흐느낌의 공간으로 영원히 남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한 예감이다. 기본 계획을 보면 고하도에는 선체 거처와 함께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 재난 반복을 막는 교육의 공간,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의 공간이다. 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목소리가 모아진 결과이기 때문에 고하도 주민들이 무라더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 머리맡에 자리 잡게 될 세월호 선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인다. 외형만으로도 슬픔과 공포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그 녹슬고 구멍난 거대 구조물은 참사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소재이겠지만 주민들에게 매일 아침 비극을 상기하며 대해야 하는 가슴 먹먹해지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고하도 주민들, 나아가 목포시민들은 새로 들어설 세월호 추모공간에 슬픔을 승화시키고 밝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내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열띤 들어보면 사계절 만개한 꽃을 볼 수 있는 대형 식물원이나, 상가골 센토사 섬의 주봉 버드파크처럼 자유의 상징인 새들이 가득한 화조원 같은 시설이 더해지면 추모 일련도의 분위기가 안전의식 고취와 휴식 관광을 겸한 명소의 분위기로 변화할 수도 있다고 한다.

떠난 이와 견뎌낸 이에 대한 사랑만큼, 현재를 사는 사람과 미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고 어쩌면 오히려 더 커야 할지도 모른다. 세월호 선체를 평생 품고 살아갈 용기를 내준 고하도 주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빛을 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고마움을 갚을 방법도 찾아 실천해야 한다. 정부와 우리 사회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를 따뜻하게 품어 안아 준 목포시민, 특히 고하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기념사업이 전개되길 많은 이들이 조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無等鼓

“시험장에서의 특실은 바둑과 같을지니/ 한 번 실패한들 어찌 크게 이길 날 없으리/ 향아가 계수나무 다 나눠주었다 격정 마오/ 자네에게 줄 가지 내년에 어찌 빠지리.”

고려시대 대문장가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1168-1241)가 지은 ‘낙방한 고생(高生)을 위로하다’라는 시이다. 강민정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가 펴낸 ‘이규보 선생님 고려시대는 살 만했습니까’ (푸른역사)를 읽다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요즘이 임시와 취임시장이기 때문일 것이다. 옛날에는 과거에 급제함을 ‘계수나무의 가지’를 꺾는다(折桂)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한다. 저자는 3, 4구에 대해 ‘올해는 달에 사는 향아가 널 건너뛴었지만, 내년에 계지(桂枝)를 꺾어서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마,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풀이한다.

이규보 역시 9세에 문장을 지어 신동이 라 불렸지만 16-21세까지 과거시험에 거듭 낙방했다. 22살 때 1차 시험(국자감시)에 장원으로 붙었으나, 이듬해 최종시험(예부시)에 턱걸이로 붙었다. 그리고

8년 동안 관직을 받지 못하다 32살에 지방관 벼슬을 얻었으나 1년4개월만에 면직되고 말았다. 800여 년이 흐른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이규보는 관료가 아니라 고려시대의 생활상을 고스란히 담은 시들과 자유분방한 문인의 모습이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실패연구소’가 최근 설립 3주년을 맞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는 과감한 도전정신 함양이라는 연구소 설립 취지가 이채롭다. 토마스 에디슨의 백열전구 발명처럼 무(無) 상태에서 출발하는 연구개발에서 ‘실패’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흔히 ‘청춘=도전’이라 고 말한다. 그렇지만 요즘 청년세대는 임시와 취업 등 청운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없는 실패를 맞보곤 한다.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청춘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니다.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관문을 스스로 통과해야 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시험에 지치고, 취업에서 실패해 낙담에 빠진 청춘세대를 응원한다. “괜찮아! 다음 기회가 또 찾아올 거야!” /송기동 예향부장song@

청춘의 실패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편집인 崔宰豪 | 논설실장 蔡熙鍾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洵堯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0-0195)
정치부	220-0634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FAX 220-0195)	(FAX 222-0195)
제2사회부	220-0680	디지털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